



이담의 표정

김일성 사후 1년 - 남북관계

장주석

연합통일 논실위원

‘북한은 김일성’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접은 북한은 김일성 사후 1년을 보낸 시점에서 별로 달라진게 없이 자기식대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작년 7월 8일 김일성이 죽은 다음 통일 등 한반도 문제에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했으나 북한 내부사정이나 남북관계에 기본적으로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후 이른바 유훈통치를 내세워 북한의 최고 통치 직위인 국가 주석과 노동당 총비서 자리를 1년 이상 공석으로 비워놓고 있다. 김일성의 후계자인 김정일은 공식적으로는 국방위원장과 인민군 최고사령관 이름으로 북한을 통치해 왔다. 북한은 아직까지 김정일의 최고권력 승계에 대해서 아무런 시사도 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오는 10월을 전후해 주석직 승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될 뿐이다. 북한 정권에게 있어서 지난 1년간은 죽은 김일성 시신을 ‘모셔놓고’ 살아온 길고도 지루한 추도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지금 김일성시대를 김정일시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개방의 물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으면서 체제를 공고히 하느냐의 상충되는 고민을 안고 있다. 김정일은 자신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 ‘혁명적 수령관’에 따라 김일성과 김정일을 동일인물로 선전하면서 보다 실용적인 통치철학을 기반으로 ‘김정일시대’를 대내외에 부각시키기 위한 가히 혁명적인 체제준비 전략을 구사

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김일성 사후 대외적으로 특히 남한에 대하여서 초강경의 경직된 자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대남비방강화 등 강경일변도의 태도 밑으로는 많은 변화의 조짐을 함께 보인 것 또한 사실이다. 난항을 거듭하던 한반도 핵문제 협상에서 결국은 한국형 경수로를 받아 들이기로 한 것이나 속적인 일본 그리고 대화까지 거부하며 적대감을 표하던 남한과 쌀을 통한 당국자회담을 성사시키고 더구나 인공기 계양 강요를 둘러싸고 드물게 사과까지 한 점 등 실로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변화를 보인 셈이다.

김정일체제는 만성적인 경제침체와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김일성시대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조치들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5년간 약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경제난을 탈피, 주민들의 기본생활을 유지시키는 일이 북한이 당면한 급선무라는 것을 충분히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다. 특히 식량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김정일체제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일종의 위기감에서 비롯된 사실상 굴욕에 가까운 정책의 변화들이 잇따르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이 한국쌀을 받아들이는 일차적인 이유는 주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함이다. 김일성에 비해 카리스마가 떨어지는 김정일로서는 주민들의 기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자신의 통치능력에 대한 주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일본쌀을 공급받고 대일관계의 개선을 이루기 위한 선행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쌀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북한은 국제적인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 '원수'로 여겨온 미국, 일본과 핵과 쌀을 매개로 관계개선을 통한 궁극적인 수교를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해외자본의 유치와 외화벌이를 위한 관광객 유치 등 대외개방은 저들로서는 '자력갱생 노선'에 대한 포기나 다름없는 것으로 체제 존립을 위해 어쩔수 없는 벼랑끝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체제보존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노선으로의 선회는 그들이 우려하고 있는 대로 대외개방에 따른 주민의식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잠정적인 형태로 그리고 특정 시기에 한

정되게, 충격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대외개방이라 할지라도 폐쇄사회인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엄청난 파장을 남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저들은 대외개방이 가져올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김일성 추도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대남비방을 늦추지 않았으나 큰 물결을 막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서방을 향해 열린 틈새로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자본주의 물결이 점진적으로 유입된다는 것은 북한주민들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더구나 가까운 이웃이자 맹주인 중국에서부터 불어오는 자본주의의 훈풍과 서방세계의 자유바람을 제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리라 여겨진다.

대부분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김정일이 주민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김일성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면 할수록 주민들의 다양한 의식변화와 욕구 확대로 새로운 위기상황을 맞이해야 하는 모순적인 현실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김정일로서는 개혁과 개방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후계자로 만든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를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김

정일이 안고 있는 최대의 딜레마이며 하루 속히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남북경협은 쌀회담을 계기로 일단 활성화될 수 있는 물꼬는 텃지만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북경에서 열린 2차 쌀회담에서의 성과는 김일성 사망 이후 중단됐은 남북대화과 경협 확대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경협을 포함한 남북관계가 앞으로 빠른 속도로 개선될 것이라는 다소 성급하고 희망적인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남북 쌀회담이 그동안 누적됐은 쌍방간의 불신과 오해를 상당부분 해소하고 체제의 차이에서 파생된 이질감과 시각차를 교정, 의식의 공유부분을 확산시키는 데 적지않게 기여했다는 평가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지난 6월말 대북 투자비를 달러화 등의 외화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북투자지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간 데 이어 일부 기업체의 기술자 방북을 승인하는 등 수순을 밟아 가는 것은 남북경협을 투자단계로 끌어 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쌀을 받는 것과 경협을 확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으나 2차 쌀회담에 회담대표로 나선·선봉개방 실무총책임 대외경제협력추진위

원회 부위원장과 조선삼전리총회사 사장 등을 포함시킨 것은 경협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표명이라 볼 수 있다.

남북경협이 본 궤도에 오르기 까지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겠지만 남북한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활성화의 길을 찾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관계는 결국 경제협력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가장 손쉬우며 또 바람직한 일이라 여겨진다. 우리의 대북 쌀지원과 경협제공 의사를 북한측이 받아들이고 보다 활성화된 경협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북한측의 보다 성의있고 성실한 자세와 그리고 상호 신뢰를 쌓아 가는 일이 급선무라 생각된다.

북한은 대남관계에 있어서 정경분리원칙의 기초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대북 쌀제공을 계기로 남북 당국자간 회담이 진척을 보이고 대화가 활성화될 경우 경제는 물론 정치, 외교, 스포츠, 이산가족문제 등에 대화의 초점이 맞추어 지겠지만 경수로문제를 비롯 경제문제의 협력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실용외교로 변신을 꾀하거나 아니면

김정일의 권력승계작업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던지간에 북한의 대외정책이 변화될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북한의 대남정책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김정일이 공식으로 최고권좌에 오른 뒤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대북정책도 이같은 전망에 따라 북한의 변화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어느 정권의 공적이나 국내정치를 의식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대북정책은 실패로 끝나기 마련이다.

북한은 김정일시대를 맞아 자본주의 국가와의 관계정상화를 이루면서 외부세계의 정보와 자유화바람을 본격적으로 맞지 않을 수 없으며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들에 의해 북한사회의 엄청난 변화가 불가피하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김정일정권의 운명은 경제회생정책의 성공 여부와 부분적인 개방이 가져올 자유화의 바람, 경제회생의 속도와 방법을 둘러싼 지도층간의 갈등, 군부의 향방 등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을 해본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의연하고 당당한 자세와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과 시각에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